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추진 규탄 성명>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월 28일 일본 정부는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조선인 강제동원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과 같이 일본 정부가 역사부정론을 계속 고집한다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산업유산) 등록 당시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비롯한 메이지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どころ产业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통해 강제노동을 부정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중국인과 연합군포로의 강제노동은 철저하게 감추는 등 역사부정론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왔다.

2021년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 8B.14 & 42 COM 7B.10)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해 해석전략을 마련하라는 결정문(44 COM 7B.Add2)을 채택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곳의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본 시민들에 의해 이미 밝혀졌으며, 1992년에는 일본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초청하여 사도에서 증언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사도광산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니가타현(新潟県), 아이카와정(相川町)의 공식 역사에도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1,500명 이상의 조선인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의 역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자적인 주장’이라고 무시한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메이지산업유산 등록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역사를 숨기기 위해 메이지시대로 시기를 한정하여 신청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

정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 대상 시기를 센고쿠(戰国)시대 말부터 에도(江戸)시대로 한정하여 강제동원의 역사를 숨기려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역사왜곡 시도는 국제적인 망신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세계유산 등록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세력은 세계유산을 국내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역사 갈등을 선동해 왔다. 아베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는 기사다 정권의 역사부정 시도는 사도광산에서 고통 받은 피해자들, 강제동원의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세계유산을 편협한 국가주의의 도구로 이용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시도는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보편적 정신의 함양을 지향하는 유네스코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5년 메이지산업유산 등록 당시부터 일본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제노동의 역사를 기록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동원의 실태를 밝히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우리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록에 대해 앞으로도 일본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월 28일

민족문제연구소